



미국 대선
2, 3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입국
3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4~6, 7면

방글라데시
독재자 퇴진
8, 9면

영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
9, 10면

아리셀 참사
항의 시위
16면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의 진실 10~11면

방글라데시

독재자를 물러나게 했지만 핵심 과제들이 남아 있다

관련 기사 8~9면



미국 대선

미국 민주당의 뻔뻔한 해리스/월즈 포장

김준호

조 바이든이 7월 말 대선 후보 자리에서 사실상 끌려 내려온 후, 미국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은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바이든보다 ‘진보적인’ 인물로 그리려 무던히 애쓰고 있다.

해리스가 “인종학살자 바이든(제노사이더 조!)”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그나마의 경쟁력도 잃을까 우려해서다. 이는 민주당이 이스라엘 지원 문제로 대단히 큰 타격을 입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바이든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지원해 온 해리스를 이스라엘에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포장한다(관련 기사 본지 514호 ‘카멀라 해리스, 이스라엘 지원해 온 또 다른 장본인’).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해를 문제 삼기도 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위로 발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권리’(자위권)를 옹호한다고 매번 덧붙였다.

해리스의 국가안보보좌관 필 고든이



해리스는 임신중지권 보장을 내세우지만, 과거에도 선거에서 표만 얻고 배신했다

8월 8일에 쓴 글도 그런 덧붙임의 한 사례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란과 이란의 후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에 맞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

“부통령은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 금지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 전날 해리스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가한 민주당 인사들과 짧게 면담한 후, 추후 이스라엘 지원 중단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자 고든이 재빨리 진화

에 나선 것이다.

또, 민주당은 유색인종 여성인 해리스가 트럼프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할 인물로 포장한다. 예컨대 해리스는 우파의 임신중지권 공격에 맞서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연방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공약의 재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2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바이든은 여성인 해리스를 앞세워

지금과 정확히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민주당은 우파의 임신중지권 공격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힘입어 하원을 수성했지만, 그후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민 문제에서는 해리스와 민주당은 진보적인 양 꾸미지도 않고 있다. 그들의 핵심 공약은 “국경의 여황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인종차별을 쏘아내며 유세한다. “나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캘리포니아주 검사장을 지내며 국경을 넘어온 갱단원·인신매매범들을 모조리 추적해 기소하고 감옥에 가렸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를 막을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공약으로 해리스와 민주당은 경제 불황을 이민자들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 정서에 부응하고 트럼프에게서 보수 성향 유권자를 빼앗아오려 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트럼프와 극우의 인종차별적 이민자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해 그들을 강화할 뿐이다.(관련 기사 본지 509호 ‘트럼프의 이민자 공격 베키는 바이든’)

해리스의 부후보 월즈, 권력층 정치인

카멀라 해리스가 미네소타주 주지사 티머시 월즈(우측 사진)를 러닝메이트로 택한 후,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주지사 샤피로가 아니라 민주당 표발 정치인 월즈를 택한 해리스의 ‘용단’에 주목했다.

하지만 해리스에게 월즈는 안전한 선택지였다. 샤피로는 이스라엘군에 자원하고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시온주의자다. 그런 자를 지명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월즈가 후보로 지명된 후, 그의 서민층 배경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친서민 색조로 덧칠됐다. 월즈가 트럼프와 그 지지자를 두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당연한) 말을 한 것도 촌철살인인 양 포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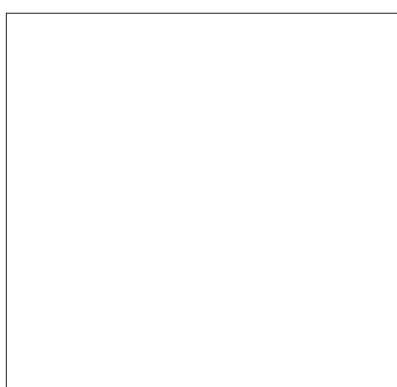
월즈가 저소득층 아동 대상 급식 지원 등 법으로 지정된 미미한 복지를 주지사로서 집행한 것이 그의 ‘친서민’의 증거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 복지라도 안 뺐고 준 것이 어디냐는 식이다.

하지만 월즈는 하원의원을 여섯 차례나 지낸 민주당 중진으로 미국 국가의 제국주의적 이익 수호에 일조해 온 직업 정치인이다.

2016년 당시 하원의원이던 월즈는 대(對)이스라엘 지원 양해각서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그 밖에도 여러 개의 이스라엘 지원 법안을 공동으로 작성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월즈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전쟁을 측면 지원했다. 월즈는 미국의 대중 무역 협상을 지원하는 기구인 ‘의회·정부 합동 중국위원회(CECC)’에서 활동하며, 국회에서 여러 건의 대중 압박 결의가 채택되도록 주도했다.

2023년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될 때 월즈는 미네소타 주지사였는데,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10월 7일 공격을 “테러”라고 규탄했고,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의 항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국채에 대한 미네소타 주정부의 투자금 약 1억 2000만 달러



“리얼 흡수저?”

를 투자 철회하라는 요구도 무시했다.

이런 정치인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인 미국민주사회당(DSA)은 “샤피로가 아니라 월즈가 지명된 것은 DSA와 그 좌파 동맹들이 거둔 성과”라고 자찬했다. 최악과 차악의 차이가 무의미할 만큼 근소한데도 말이다.

좌파라면 ‘차악’론에 안주해 민주당의 정치인 중 하나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결별하고 대중 저항을 건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도 말이다.

세상은 해리스냐 트럼프냐 두 선택지밖에 없나?

해리스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자신을 비판하면 트럼프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올려댄다.

8월 9일 디트로이트 유세장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가들이 “카멀라, 숨지 마라! 인종 학살에 투표하지 않겠다!” 하고 외치자 해리스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트럼프가 이기길 원한다면 계속 외치고, 아니면 조용히 해. 내가 연설하고 있잖아.”

경호원들에 의해 유세장에서 끌려나가는 활동가들의 뒤통수에 대고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트럼프를 돕고 있다.”

이날 항의 행동을 한 활동가 에어먼 알리는 <미들 이스트 아이>에 이렇게 전했다.

“해리스의 대응이 놀랍지는 않았습니 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다’뿐이거든요.

“트럼프가 아니라고 만사형통은 아

▶ 3면으로 이어짐

개정판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8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한국에 왔다.

현재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무와 한국 생활 등에 대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6일까지 가정 751곳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카일리 글로리 마시나그(32)씨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필리핀 대학에서 마케팅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 일할 가사관리자 모집에] 합격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모으고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가족도 도와주고 필리핀에서 대학원 다시 공부 다니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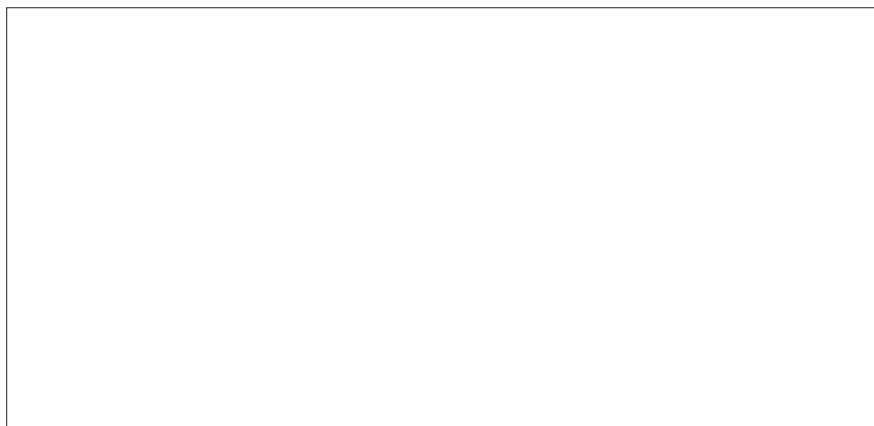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카일리 씨의 표정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가 묻어났다.

한국 정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책임을 회피하고 저렴한 노동력 투입으로 때우려고 혈안이다. 그만큼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할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의 숙소는 역삼역 근처 원룸텔로 알려져 있는데, 1.45평짜리 1인실이 월 45만 원, 1.96평짜리 2인실이 월 39만~42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매우 비좁은 데다가,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는 점과 서울의 높은 물가를 고려했을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이 돌봄과 그 외 가사 서비스 영역 사이에서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와 갈등을 빚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

한국행에 든 비용을 충분히 벌충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금세 돌아가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들어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만,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장 오세훈 등 여권 인사들, 보수언론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것은 당연히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자들 등 개혁주의자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한국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동계급을 분열시킬 민족주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이 포함돼 있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8월 6일 논평에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하며 “시범사업 프로세스에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에 속해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유입을 막거나 적어도 그 수급 조절에 자신들이 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진보당은 8월 6일 논평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저출생 반전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옹계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당은 지난해 시범사업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입장이 당사자들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재한 필리핀인 공동체 활동가에 따르면, 100명을 모집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필리핀 현지에서 무려 1만 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왔다. 한국행이 막히면 이들은 자국의 더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조건이 형편없이 열악한 나라로 가거나, 실업자가 돼야 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주노동자를 가사노동자로 쓰는 나라들의 노동조건은 한국보다 더 형편없다.

한국 유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좌파단체들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입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운동과 좌파를 불신하게 만들 뿐이다.

사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노조와 좌파 단체들의 입장은 저임금의 이주노동력 유입을 막아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자는 보수적 개량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예컨대 8월 12일 SBS 비즈 “필리핀 이모님 100명 입국… 논란 딛고 순항?”에 출연한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인력 부족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논의 없이 무조건 외국인력을 싸게 들여와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 가사·돌봄유니온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에 속해 있다.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이런 정서가 확산되면 실업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로 돌리게 되기 쉽다. 결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속죄양 만들고 노동운동을 이간질 하는 것에 취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 권위 있는 연구들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고용과 임금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고용과 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하느냐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된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그들을 국제 노동계급의 일원으로 환영하고 단결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계급의식이 제고돼야 한다.

앞서 인용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카일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이들의 한국 유입을 꺼림직하고 떨떠름하게 여기는 태도로는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고용되는 것을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싸워 모두의 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린다.

임준형

▶ 2면에서 이어짐

니쥔. 행동거지가 트럼프보다 나아야 죠.”

또 다른 활동가도 SNS에서 이렇게 꼬집었다. “해리스의 말인즉슨, 트럼프 낙선을 위해서라면 인종 학살조차 보

아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낫다는 허상이 1주일도 채 안 돼 벗겨졌다.”

이날 이후 ‘팔레스타인 청년 운동(PYM)’ 등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단체들은 해리스가 유세하는 곳마다 항의

행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해리스는 학살 공범이다. 그가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권에 도전하게 놔뒀선 안 된다.”

이렇듯 운동은 민주당의 투표 부대로 스스로를 묶어매지 않고 계속 단호

하게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선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반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가 중요할 것이다.

※ 공개 토론회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에 관한 정보를 11면에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학교 학살은 용의주도한 방침

찰리 김버

8월 10일 토요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한 학교에 피란 중이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93명이 사망했다. 지난 2주 사이에 네 번째로 벌어진 학교 공격이었고,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

가자지구 민방위 대변인 마무드 바살은 팔레스타인인 난민을 수용하고 있던 가자시티 알타빈 학교에 이스라엘의 로켓탄 세 발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바살은 그 광경을 “끔찍한 학살”이라고 묘사하며, 민방위 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뉴스의 하니 마무드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학교 공격 이후 알아흘리 병원으로 부상자가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 다수가 위중한 상태.

“하지만 병원은 인력과 의약품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병원은 붐비 직전이다. 많은 사람이 피범벅이 됐거나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그 폭격에 사용된 폭탄은 살을 뚫고 지나가는 파편이 날리도록 만들어졌다.

기자들이 찍은 폭격 현장 영상에는 산산조각이 난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대 규모이자 가장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21세기 강제 수용소에서, 이스라엘은 한 동네나, 병원, 학교, 난민 캠프, ‘안전지대’ 단위로 팔레스타인인을 몰살하면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학살은 미국과 유럽의 무기로, 그리고 모든 ‘문명화된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카타르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인 하산 바라리는 이러한 공격이 며칠 후에 시작된다고 하는 휴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벌이는 책략의 일부라고 말했다.

“바로 어제[8월 9일 금요일—역자]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카타르 도하나 이집트 카이로에 가는 것은 일종의 항복이며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하러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정부 내의 이러한 사람들을 달래려 하고 있다.”

바라리는 네타냐후가 휴전을 원하지 않으며, 휴전 협상에 휘방을 놓으려고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책략의 일부다. 우리가 휴전에 대한 희망을 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러저러한 잔학 행위를 저질러 협상에 휘방을 놓을 것이다.”

한편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지 말지 머뭇거리고 있다. 하루하루 시간만 까먹으며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총리인 키어 스타머와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 그 외 정부 인사들은 대량 학살에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저지연합(StWC)은 이렇게 규탄했다. “이스라엘의 야만성은 한계가 없어 보인다. 영국과 미국 정부의 인종학살 조력자들은 다시 한 번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PSC)은 이렇게 촉구했다. “이번 학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심각한 학살이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장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폭력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공모를 일절 그만둬야 한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초토화된 가자시티 알타빈 학교. 이 폭격으로 100여 명이 학살당했다

이스라엘이 어린이를 죽이는 이유

제국주의의 기본 관점은 식민의 목숨이 식민 지배에 의해 억압받고 말할 당한 사람들의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대량 인명 살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러한 오만함은 인종차별과 맞물려 있다. 백인 침략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흑인과 갈색 인종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겨운 논리는 낱아 빠진 어떤 편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교 공격이 보여 주듯이 지극히 현대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소수의 하마스 전사들을 겨냥해 학교를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보통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간인이 죽을 것임을 알고 그런 것이다.

토요일의 공습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기도 시간에 맞춰 학교 기도실을 겨냥했다.

저항이 좀처럼 분쇄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온갖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사 몇 명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민간인 수십, 아니 수백 명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신의 굴욕을 털 수만 있다면 어린



파괴된 가자지구 누세라이트 난민촌 내 학교

이도 기꺼이 살해하려 드는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제국주의의 지원 하에서 자행하는 학살은 호주, 캐나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원주민 말살’을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직접 계승한 것이다.

케냐, 인도, 아일랜드에서 영국 제국주의가 벌인 학살과 이스라엘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학살은 피로 이어져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행태는 언제나 그래 왔으며 이러한 만행을 낳는 체제를 혁명으로 무너뜨리기 전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 5면으로 이어짐

거듭되는 학교 공격

8월 4일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알나스트 학교, 하산 살라마 학교에 피란 중이던 팔레스타인인 난민 수십 명을 학살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민방위 대변인 마무드 바살은 사망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바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잔해

아래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의 한 병원에 있는 난민 캠프를 공격했고 최소 5명이 사망했다.

8월 3일에는 가자시티 하마마 학교를 공습해 최소 17명을 살해했다.

며칠 전에는 달랄 알무그라비 학교를 공습해 15명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체계적 고문은 이스라엘의 본질을 보여 준다

롭 퍼거슨 영국 전쟁저지연합 전국 운영위원장
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PSC) 활동가

이스라엘 스테 테이만 수용소의 이스라엘 군인 9명이 체포된 사건은 한 무리의 일탈한 군인들이 수감자 한 명을 학대한 사건 정도로 묘사되고 있다.

진실은 이스라엘이 자국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인 고문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문에는 전기 충격, 심문관들의 수감자 집단 구타 등도 있다.

한 이스라엘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수감 때문에 손상된 수감자의 사지를 의사들이 절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군과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몇

몇 “일탈한”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스테 테이만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은폐하려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역효과를 내는 듯하다.

식민 정착자 국가의 본질

수감자들에게 자행된 가장 끔찍한 고문의 하나는 불에 달군 막대를 항문에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었다. ‘인권을 위한 의사회’ 이스라엘 지부는 체포된 군인들에 의해 고문당한 피해자가 직장에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한 이스라엘 병원에 도착했었다고 CNN 뉴스를 통해 폭로했다.

스테 테이만 수용소는 정착자 식민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본질에서 비롯하는 증상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모든 남성을 “테러리스트” 또는 “하마스”라고 여기는 인종차별 국가다.

따라서 고문은 “처벌”이자 “자백”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스테 테이만 수용소의 군인들은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극우 의원들이 이끄는 폭도는 이들을 풀어 주려고 시도했다.



이스라엘 스테 테이만 수용소에 갇힌 팔레스타인인들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체포된 군인들을 “최고 영웅”이라고 칭찬하며 이들을 체포한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벤그비르는 스테 테이만 수용소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빈정댔다. “테러리스트들은 여름 캠프에 온 게 아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국가의 실체를 밝히 드러낸다. 스테 테이만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을 폭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참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Rob Ferguson, 'Israel's regime of torture shows reality of the state' (2024. 8. 6) / 번역 김동욱

지난주 초 이스라엘 인권 단체인 베첼렘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구금 시설들을 “고문 수용소 네트워크”라고 묘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베첼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에 대한 신체·심리·성적 학대가 일상적이라고 폭로했다. QR코드를 이용해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영문).



▶ 4면에서 이어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인자들을 위한 미국의 추가 무기 지원

휴전에 합의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무색하게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를 추가로 보내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지난 4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141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르는 이스라엘 추가 지원 예산의 일부다.

새로운 재정 지원의 일부는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자행한 혐의가 있는 이스라엘 군 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그 부대를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만일 제재했다면 역사상 첫 원조 중단이 됐을 것이다). “그 부대의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교정”하려 해 온 이스라엘의 노력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부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부대는 넷자 예후다

대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대와 부대원 일부는 2022년 구금된 78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남성의 사망을 비롯해 여러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대 사건에 연루돼 있다.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조처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멘 전쟁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라고 사우디 왕정을 압박한 다던 지난 3년간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특정 공대지(空對地) 무기의 이송 중단 조처를 해제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요인 암살에 이란과 헤즈볼라가 (완전히 정당하게도)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촉발될 수 있는 더 큰 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출처 Charlie Kimber, 'Israel's school massacres are part of a deliberate policy' (2024. 8. 10) / 번역 김동욱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7월 31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자 미국 등 서방 정부들과 아랍 독재 정권들은 이구동성으로 “중동 지역 내에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고 “확전 자체”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도 그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는 역겨운 위선이자 이중 잣대다. 국제법상 수도가 공격당한 국가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은 자위권을 이스라엘에만 적용할 뿐 이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확전 자체” 촉구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중동에 군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뜻이다.

물론 바이든은 하니예 암살이 가자지구 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네타냐후에게 “[미국] 대통령을 쉽게 보지 말라”며 으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테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네타냐후에게 바이든은 “안보 보장”으로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이란의 대리 테러 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백악관 성명)

이스라엘은 하니예를 암살하기 몇 시간 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레바논 정당 헤즈볼라의 군사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살해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여전히 서방 제국주의의 경비견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공격이었다.

푸아드 슈크르는 2019년 미국 정부가 “국제 테러리스트”로 직접 지목한 인사였다. 미군 241명이 사망한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공격을 주도했다는 게 그 혐의였다.

미국이 헤게모니 위기를 겪자 중동 지역 강국들은 자기 방식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테헤란과 베이루트에서 암살을 저질렀다. 또, 이스라엘은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가자시티 내 알타빈 학교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100여 명을 학살했다.(그러자 하마스는 새 휴전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바이든이 제출한 기존 가자 휴전안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영자 일간지 <하아레츠>의 칼럼니스트 기드온 레비는 이렇게 말했다.

“[국무장관] 블링컨과 미국 정부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했다면 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이것은 국제관계가 아니라 애들 장난이다.”(알자지라, 8월 1일 자)

그 결과 분쟁 지역들은 늘어나고 발화점에 가깝게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내밀하게 개입하고 있다. 친헤즈볼라 성향의 레바논 일간지 <알 아크바르>는 특히 미국의 중동 특사 아모스 호흐스타인이 푸아드 슈크르 암살에 관여했다고 비난했다(8월 1일 자).

호흐스타인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국경지대 충돌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맡은 대통령 중동 문제 보좌관이다.

<알 아크바르>에 따르면, 골란 고원의 마즈달 삼스에 대한 로켓 공격이 있은 뒤 호흐슈타인은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레바논 측에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에 머물고 있던 슈크르를 살해했다.

누구도 상황 통제 못해

이스라엘이 연달아 암살 작전을 벌이자,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지난해 10월 7일 경계 실패에 대해 “복수”했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선정적으로 추켜세웠다.

확전 가능성이 상당히 실질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암살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10개월 넘게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를 벌이고 서안지구에서도 잔혹한 공격을 감행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지금 제2의 나크바를 겪고 있다. 150만 명이 폭격을 피해 피란을 갔고, 4만 명 가까이 죽었으며, 1만 명이 잔해 속에서 썩어가고 있고, 9만여 명이 부상당했다.

5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망했고 36개 병원 중 34개가 파괴됐다. 수십만 명이 기아와 전염병의 위험



네타냐후는 제2의 나크바를 벌이고 있지만, 성공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네타냐후는 제2의 나크바를 벌이고 있지만, 성공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에 처해 있지만 의료 서비스가 없어 대부분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다.

가자지구 곳곳은 식량·물·전기가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지금 가자 지구는 지난해 10월 9일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예고한 대로 됐다. “나는 가자지구를 완전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전기·식량·연료 등 모든 것이 차단될 것이다. … 우리는 인간 짐승들과 싸우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꺾지 못하고 있다. <하아레츠>는 이미 4월 8일에 이렇게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쫓는 승리는 그가 말하는 것만큼 가깝지는 않다: 이스라엘군 병사들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 목표 달성에 다가가지 못했고, 이제 서방 측의 더한층의 반대와 씨름해야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와 중대위협프로젝트(CTP)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 공격은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인]라파흐 여단에 대한 해체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몇 주 동안 지연되고 있다.”(알 자지라, 8월 6일 자)

실제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정부들을 위기에 빠뜨렸다.

10개월 전에 서방 지도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편들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영국 총선에서는 집권 보수당이 대패했다. 독일의 여당인 사민당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3위로 밀려났다. 미국에서는 “학살자 조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로 대체됐다.

정치 위기의 방정식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대입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이 주선했던 모든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합의한 내용(“임시 민족 화해 정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체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줬다.

이런 현실들을 보건대, 이스라엘이 하니예를 암살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

텔아비브대학교 국가안보연구소는 하니예의 “물리적 소멸”이 하마스의 정치적·군사적 능력, 그 내부 조직이나 더 넓은 팔레스타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알 자지라, 8월 1일 자).

또 다른 이스라엘 측 분석가도 <파이낸셜 타임스>(8월 2일 자)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이스라엘 군사 정보 장교이자 텔아비브대학교의 수석 분석가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하마스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정책이 하마스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면에

▶ 7면으로 이어짐

무섭게 빨라지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발걸음

한미일 군사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이하 ‘한미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세 국가의 군사 동맹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한미일 연합 훈련과 3국 고위급 회의를 정례화·체계화하기로 한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일 군사 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뿐 아니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규정했다. 한미일 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 한미일이 군사 작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나토에 따르면) “상호운용성”은 동맹국 군대들이 같은 전략적·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3국은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작전예규(SOP) 합의에도 거의 도달했다.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상호운용성은 예전부터 논의, 추진돼 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프레임워크’의 해당 내용은 한·미 간보다는 한·일 간에 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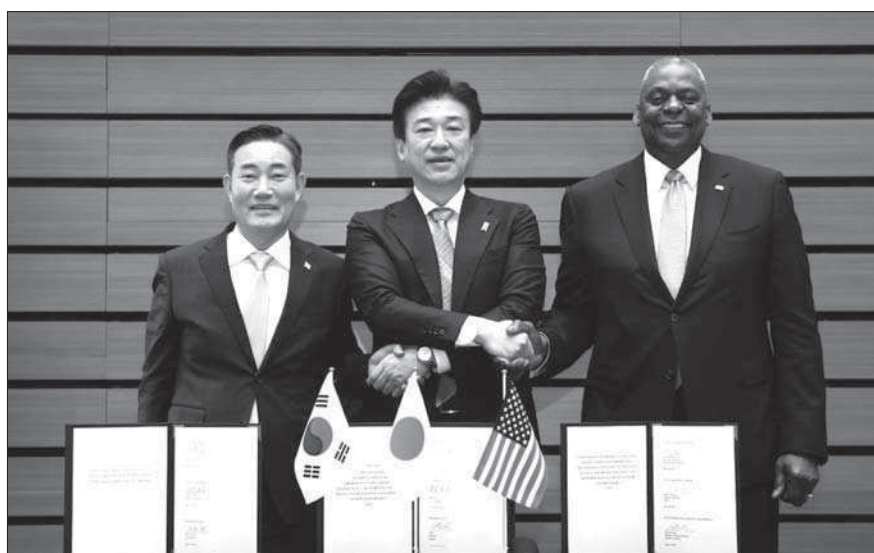
금기와도 같은 한일 군사 동맹을 향해 재걸음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 동맹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축은 미일 동맹이다. 미일 군사 동맹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중심축으로 중첩되는 여러 동맹 그룹들(쿼드, 오키스, 한미일, 미·일·필·호, IP4(일본·호주·한국·뉴질랜드) 등)을 긴밀하게 묶어 내려 해 왔다.

7월 28일 미국은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전환하고, 일본과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본은 자위대에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의 본격화는 아시아의 불안정을 키울 것이다. 7월 28일 3국의 국방장관 회담

주일미군사령부의 파트너 격이다.

이는 전투 기능을 갖춘 미군 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서 중국 코앞인 일본으로 전진 배치된 것이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를 가리켜 “미일 동맹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미국에게서 전투기 등 무기를 대거 사들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논의하는 미·일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7월 30일에는 미일 외교·국방 장관들이 처음으로 ‘확장 억제’ 회의를 가지고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워싱턴의 공약,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해” 논의했다(요미우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위대와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프레임워크’ 회의와 같은 날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정례협의체 등 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프레임워크’는 최근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이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의 함정 수리 사업을 수주하려고 경쟁하는 것과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중국 해군력 억지에 한국의 기여를 높인다는 지정학적 문제도 깔려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지역에

파견된 군함을 수리하려면 평균 26일에 걸쳐 본토까지 옮겨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같은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국내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해 한미일 협력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정부 보도자료에도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 대신 ‘3국 안보 협력’ 또는 ‘3국 파트너십’ 등의 용어를 쓴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프레임워크’는 한국이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의 일부로서 제국주의 간 갈등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는 정부의 말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일 제국주의의 편에 서는 것이 곧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전쟁의 불씨가 될까 두려움에 떨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2004년 나토에 가입했고 2010년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원이 됐다)를 보라.

그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나토 가입

을 추진하는 등 서방 제국주의 편에 서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일부가 됐다. 한국도 ‘아시아판 나토’ 결성 노력에 가담하면서 커다란 위험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 드라이브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를 다시 한 번 손쉽게 내쳤다. ‘한미일 프레임워크’ 발효 하루 전날,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됐다.(이에 관해서는 10~11면에 실린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기사를 보시오.)

한미일 동맹 반대? 못 믿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프레임워크’가 한반도를 위협하게 만들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 추진을 비판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는 반제국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핵심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을 외교·안보·경제의 기본이라고 보고, 일본 제국주의와 단절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거래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비판할 뿐, 군사적 협력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었다.

이는 문재인 등 전임 민주당 정부들이 미국의 요청과 한일 협력 증진을 우선해 일본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관련 기사: 본지 327호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기에 때문에 쉽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만, 집권했던 시절의 배신적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 이 점을 보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이 반복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미일 동맹을 반대하는 좌파는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워야 한다.

김승주

▶ 6면에서 이어짐

서 볼 때 이런 살해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차 인티파다 기간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핵심 지도자들을 모두 죽였지만 2년 후 하마스는 선거에서 승리했

고 3년 후에는 가자지구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2012년 하마스의 정치적·군사적·이념적 지도자였던 아흐마드 자바리를 살해했지만 10년 뒤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매우 극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8월 6일 하마스는 가자지구 하마스 수장인 야히야 신와르를 새 정치국장으로 임명했다. “하마스 지도자들이 중동 어디에서도 안전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최고 지도자가 [가자지구의] 터널 어딘가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알 자지라, 8월 6일 자)

지금으로서는 중동의 위기가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없다. 아무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김인식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참가자(방글라데시민주노동조합 사무국장) 인터뷰

“하시나 정권은 물러났고, 새로운 방글라데시를 만들 겁니다”



사진 출처: Rayhan9d / Wikimedia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총리 하시나를 퇴진시킨 항쟁과 현 상황에 관해 방글라데시민주노동조합 공동 사무국장인 **마숨 씨**(9면 사진)를 인터뷰했다. 마숨 씨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탄압을 당했고, 2007년 12월 방글라데시로 추방됐다.

거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난 16년 동안 쌓인 분노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괜찮아요.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시나가 지난 일요일 인도로 도주한 날까지 사람들이 경찰서와 집권 세력이었던 아와미연맹(AI)의 건물들에 불을 지르고 부수는 일이 계속됐어요. 경찰은 모두 도망갔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5년 동안 사람들이 받아 온 억압과 압박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계속 부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일단 안정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동네별로 집회가 열리고 있고, 여기서 불필요한 싸움이나 파고는 피하자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하시나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방글라데시를 만들자는 거죠.

누가 각 지역에서 집회를 이끌고 있나요?

학생 운동 지도부가 매일 특정 시간에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 지도부는 각 지역과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 123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지하는 지식인, 교수들도 뒤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는 학생들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어요. 교통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

안 유지대도 동네별로 꾸려졌어요. 보통 8~10명 정도로 치안 유지대를 꾸려요. 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시위대와 학생들이 나서서 길거리를 청소하고, 지역 주민들은 먹을 것을 이들에게 갖다주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시위대는 소수 민족 억압에 반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힌두교 사원이나 소수 민족 소유의 가게 등을 지키는 거죠.

하시나 정부가 하도 민족 간 갈등과 차별을 부추겨 놓아서 흑시 모를 공격이나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 열 시까지 시위대

와 함께 같이 이런 활동을 하다 왔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평등이에요.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국민당(BNP)은 아와미연맹과 마찬가지로 우파 정당입니다.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입니다.

그에 비해 좌파는 운동 초기부터 뛰어 들었어요. 좌파 학생들이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노동자들도 한마음으로 학생 시위를 지지했어요. 전 사회 부문의 학부모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1990년[당시 전투

방글라데시 독재자를 퇴진시켰지만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글라데시 학생 시위대가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5일 월요일에 사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망간 것이다.

통행금지령을 무시하고 거리에서 군경과의 유혈 전투를 준비 중이던 수만 명은 총리 퇴진 소식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다.

경찰과 병사들은 가장 최근 학살이 자행된 4일 일요일 전에도 학생 시위대 수백 명을 살해했고, 4일에는 사망자가 100명 더 늘었다.

그런 만큼 총리가 달아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우렁차게 환호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위 참가자 타우피쿠르 라만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승리이자 민중의 승리입니다. 한참 만에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서 행복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일시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결국 그 분노는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의기양양한 시위대는 수도 다카에 있는 하시나의 사저로 물려가 내부 물건을 손에 닿는 대로 부숴다.

일부는 하시나의 사치스러운 가구를 거리로 끌고 나와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하시나의 사리[방글라데시 등지의 여성 의상]를 입었다. 일부 시위대는 독재자의 특별한 닭들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하시나가 이끌던 아와미연맹 정부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그의 동료들의 집과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약탈당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시위대는 하시나의 금융 자문가의 집에도 들이닥쳤다. 그는 하시나 일당이 방글라데시를 약탈하고 사리사육을 채우도록 도왔다.

그 영상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엇이든 가져가세요. 모두 가져가세요. …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월요일 저녁이 되자 군부와, 오랫동안 억압받은 야당 방글라데시국민당(BNP)이 회담을 갖고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다.

거리 운동과 전국적 불안정이 계속 될까 봐 두려웠던 이들은 재빨리 운동에 양보했다. 군부는 석 달 안에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 또 체포된 시위대를 모두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가로 학생 지도자들은 시민 불복종을 멈출 권한을 달라는 군부의 요구에 동의했다. 군부가 BNP 의장 칼레다 지아를 석방하기로 합의하자, BNP도 군부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러나 화요일 오후가 되도록 군부는 소수의 시위대만 풀어 줬고, 석방되지 않은 활동가들의 가족과 동지들은 그들이 심각하게 고문당했는지 모른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석방 지연은 지금이 반정부 운동에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보여 주는

조짐이다.

군부는 거리 운동이 잦아들고 학생들이 거리를 떠나 다시 문을 연 대학가로 돌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 된다면 군부에 가해지는 압력도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군부는 약속한 선거를 계속 연기해도 된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아와미연맹은 수익성 좋은 정부 계약과 부패 거래로 장성들의 배를 채워 줬다. 또, 군인들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UN “평화 유지군” 임무를 찾아다녔는데, 여기에 참가하면 짭짤한 임금과 해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수년 동안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률이 평균 6퍼센트를 웃돌았기에 정부는 돈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키울 재력이 있었다.

그런 부 중에서 빈민과 중간계급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거의 없었고 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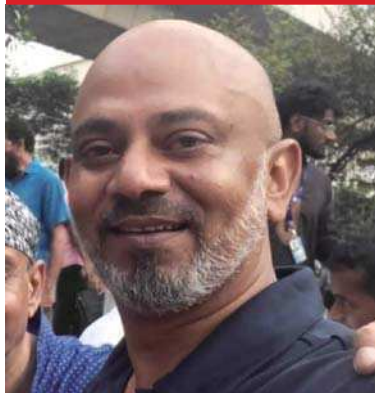


사진 출처 Monruzzaman Masum (메이스트)

적인 민주화 항쟁이 벌어져 에르샤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이래 처음 벌어진, 민중의 진정한 혁명적 운동입니다.

총리 하시나의 도주는 기쁜 일이지만, 군부가 권력을 잡고 있어 우려됩니다.

총리 하시나는 인도로 도망갔어요. 원래는 다른 나라로 가려 했는데, 받아 주는 곳이 인도 말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인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박사가 정부를 이끌 수 있게끔 한다고 해요. 유누스 박사가 17명을 뽑아서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를 이끌 거예요. 국제 사회의 압력도 있고 해서, 군부가 아예 권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정리 박이랑

려 그들은 수년 동안 생활비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다.

군부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새로 수립될 정부에 자신들 몫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쩌면 민주주의 자체를 내던지려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일한 대비책은 학생 운동이 계속해서 동원 상태를 유지하고, 공장과 항만의 노동자들을 참가시키기 위해 요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 선거 실시는 시작일 뿐이다. 인구 1억 7000만 명인 방글라데시에서 노동자와 빈민은 상층의 약탈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를 새로 건설하길 바라고 있다.

유리 프라사드

출처 Yuri Prasad, 'Key tasks remain after protest drives out Bangladesh dictator' (2024. 8. 06) / 번역 김중환

영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파시스트를 압도하다

8월 10일 영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분출해 극우와 파시스트들을 압도했다. 영국 곳곳에서 극우 시위대가 무슬림과 난민을 위협하고 공격하던 그 전주의 상황이 극적으로 뒤집힌 것이다. 전환점이 된 것은 8월 7일에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였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찰리 김버가 그 승리의 의미를 짚으며, 파시스트들을 계속 제압하고 더 강력한 사회주의 세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8월 8일에 작성됐다.

모든 승리 이후에는 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전투가 벌어진다. 8월 7일 [영국 곳곳에서 파시스트들을 압도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눈부신 성공을 거둔 후 그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파시스트 세력이 수십 곳의 이민자 지원 복지 센터와 법률 회사, 난민 지원 단체 등을 공격하며 제기한 위협에 맞서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다.

대부분의 곳에서 극우는 아예 거리에 나오지도 못하거나 거리에 나오더라도 겁에 질려 경찰 통제선 뒤에 숨었다.

투쟁이 끝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느 언론과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그날 행동의 급진성을 누그러뜨리려 한다.

그들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 승리에서 핵심 구실을 한 사람들은 폭행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거리에 나선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과 노동계급 사람들이 주웠던 시위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동의 조직적 구심에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와, 그간 팔레스타인에 연대해 행진했던 수만

은 사람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는 진실을 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 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는 권력층에게 매우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점을 지우려 한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언론 보도를 바꿔 놓았고, 이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언론과 정부가 여전히 진실을 체계적으로 은폐하려 한다.

노동당 정부의 치안장관 다이애나 존슨은 서둘러 언론을 통해 그 승리가 주되게 경찰과 법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은 "경찰의 대응,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거리를 지켜 달라고 경찰관들에게 촉구하는 행동"을 칭송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고 기소하여 법정에 세운 경찰의 대응"을 칭찬했다.

대중 행동의 승리

7일 저녁 BBC 뉴스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칭송하는 보도로 넘쳐났고 잉글랜드 전역의 상황을 생중계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BBC 웹사이트에는 인종차별 반대 행동 사진과 영상, 보도가 게재돼 있었다. 하지만 곧 BBC는 경찰과 정치인들을 인터뷰해, 그 시위대를 경찰의 유용한 지원군 정도로 깎아내리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룻밤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변화였다.

이제 BBC는 "찰스 국왕이 전국의 공공질서 혼란에 관해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는 소식 따위를 보도한다.

다른 언론들은 BBC만큼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역겹기는 마찬가지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폭도에 굳건히 맞서 단결한 영국"이라는 헤드라

인과 함께 월섬스토에서 열린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진을 커다랗게 1면에 실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BBC는 이렇게 논평했다.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1면에 실린 그 사진은 경찰들이 시위 장소에 어떻게 계속 함께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1930년대에 파시즘을 옹호하며 "검은 셔츠단 만세"라는 기사를 실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 <데일리 메일>도 비슷한 사진과 "지난밤 폭도에 맞선 증오 반대 시위대"라는 헤드라인을 1면에 실었다.

두 신문사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영국의 자랑"이라고 칭송하면서, 이제는 적절한 방식의 인종차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즉 자신과 같은 언론이나 영국개혁당, 보수당, 여러 노동당 정치인에 의한 인종차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8월 7일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통해 뒤흔들음이 입증된 세력은 경찰도, 법원도, 노동당도, 노동조합 지도자도 아니다.

울더쉴이나 채텀 같은 곳에서는 극우의 실질적인 동원에 맞서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인종차별 반대 거리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종차별적 폭도들이 날뛰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없거나 미약했던 소수 지역에서는 극우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경찰은 극우를 진압하지 않았다.

극우가 거리에 나오지 않은 곳에서조차 이는 대개 그곳에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종차별 반대 행동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운동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8월 7일 오후를 앞두고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었다. 당연히게도 특히

▶ 10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Steve Eason (블라카)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의 진실

하세가와 사오리 씨는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청년 사회주의자이다. 한-일 통번역사이자, 인하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고,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공역자이다.

지난달 말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현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등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일본 정부는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등재 대상 기간을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의 에도 시대로 한정하고, 일본 전통 수공업업을 통한 금 생산 체제를 강조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추가적 권고' 항목을 통해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강제동원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 이 난처함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해결해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표결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사도광산 등재가 결정된 것이

다. 한국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외교 참사,' '역사 문제 포기'와 같은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 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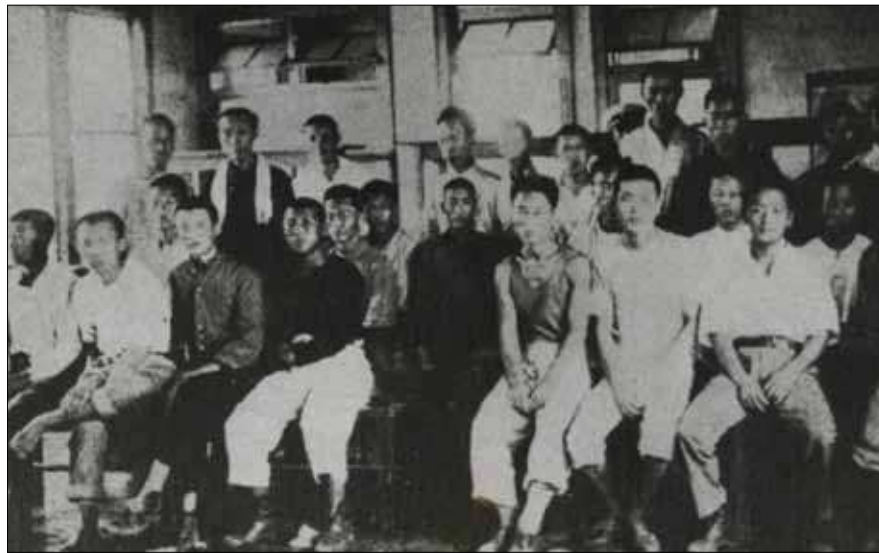
한국은 202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돼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세계유산 등재에는 통상 위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전체 합의(컨센서스)가 이뤄질 수 없다.

더구나 피해국이기도 한 한국의 정부가 대화와 표결 연기를 요구할 경우, 일본 측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역사 왜곡을 이유로 투표를 보류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통렬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사도광산이 위치한 지역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1000명 이상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한국 측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 전시는 등재 예정 지역에서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이카와 향 토박물관에서 전시됐으며, 전시물 역시 '강제동원'이나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불 거부, 조선



“매 맞으며 일한 지옥” 일제의 탄광 강제노역에 동원된 조선인들

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이행 거부 등 수많은 역사 왜곡을 반복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본 정부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강제동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고 이행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2015년 7월, 박근혜 정권이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아내지 못했을 때보다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제2의 군함도, 사도광산

2015년 군함도(하시마 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세계유산위원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군함도가 등재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등재된 지

5년이 지난 2020년에야 비로소 군함도에서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쿄에 '세계유산정보센터'라는 시설이 만들어졌다.

이 시설은 사전 예약 없이는 이용할 수 없고, 시설 내 촬영도 금지돼 있는 등 매우 폐쇄적이어서 약속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학대나 차별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등 마치 강제 노동과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묘사하는 전시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군함도 때 일본 정부가 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 9면에서 이어짐

무슬림·흑인·아시아인 사이에서 두려움이 컸다. 인종차별 반대 행동은 일시적으로나마 그 두려움을 깨뜨렸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보도했듯 실로 그날의 시위는 두려움을 “반대편으로 넘겼다.”

노동당의 경우, 거의 모든 의원들이 사람들을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썼다.

언론인 오언 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내무장관 이벳 쿠퍼와 하원 원내대표 앨런 캠벨은 노동당 의원들에게 반파시즘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8월 7일 오전 9시 화상 회의에서 내려졌다.”

런던 동부 월섬스토에서는 노동당 의원 스티리 크리시가 온갖 수를 써서 사람들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참가를 막으려 했다. 크리시는 시위 전날 저녁 영상 메시지를 게시해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권고를 전했고, “젊은 무슬림 남성들은 도발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크리시는 지역의 이맘[이슬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다행히도 월섬스토에서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시를 무시하고 시위에 참가해 파시스트를 물리쳤다.

크리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월섬스토가 “사랑의 고장”이 되었다며 “오늘 저녁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준 경찰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극우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8월 7일 시위에 사람을 거의 동원하지 않았다.

짚고 넘어가야 할 더 폭넓고 매우 중요한 의의가 하나 있다. 이번 주에 벌어진 반파시즘 행동은 거리와 작업장에서의 저항에 기반한 투쟁하는 좌파가 성장할 잠재력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8월 7일 시위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에 환호했다. 그간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가했다.

8월 7일의 시위는 새로운 운동이 결

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단호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과 전투적인 노동조합원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한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 뭔가가 탄생하고 있었고 지금보다 더 크고 낮고 외향적인 좌파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런 가능성은 얼마 전 총선에서 노동당보다 좌파적인 후보들이 얻은 표에서도 엿보였다.

지금 거리 시위에 나선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중에는 매우 첨예하고 중요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파업을 지지하고 환경 파괴에 맞

▶ 11면으로 이어짐



“나토와 공조 강화”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의 참관 후 만난 윤석열과 기시다

일본 정부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 일본인 탄광 노동자 착취

사도광산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차별을 당한 조선인의 피해를 밝히고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도광산의 역사는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되기 전부터 착취와 억압으로 얼룩져 있었다. 제국주의 전쟁 아래에서 일본인 노동자들 또한 가혹한 전시 노동으로 희생됐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전투기와 군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철 생산과 연료에 이용되는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선인 강제동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 사도광산과 같이 모석에 석영이 많이 함유된 광산의 경우, 규폐(珪肺)라는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 사

도광산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단명했다. 붕괴 사고와 추락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격화된 1943년 이후에는 광산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 부인 회마저 광산 노동에 동원됐다.

사도광산을 소유한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했던 다른 광산(훗카이도에 위치한 미쓰비시 비바이 탄광 등)에서도, 일본인 노동자들이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가혹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노동에 시달린 사실이 여러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각국 지배계급의 제국주의적 대립에서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 10면에서 이어짐

서고 트랜스젠더 해방을 지지하며 빈곤·착취·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사회주의자들도 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8월 7일 시위를 발판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8월 10일 열리는 전국 집중 행동을 건설하고,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를 강화하고, 나치 토미 로빈슨과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또한 모든 운동의 핵심에 더 많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

최고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은 그저 기존 운동들의 묶음에 그쳐선 안 된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든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운동에 정치적 명

료함을 부여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관해, 사회의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역사의 교훈에 관해, 그 밖에 많은 것에 관해 명료한 주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억만장자들과 그들을 만들어내는 체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증오하고 그것을 낳는 체제를 전복하고자 한다.

우리의 적은 병든 사회의 증상만이 아니라 그 체제 자체다.

파시스트를 계속 제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노동자당을 더 크게 건설해야 한다.

출처 Charlie Kimber, ‘After 7 August, celebrate anti-racists—not cops, courts or politicians’ (2024. 8. 8) / 번역 이진화

이 문제의 핵심 배경 — 한미일 동맹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서두르는 것은 일본 국내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은 지방 도시로, 1991년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과 얼어붙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록에 사활을 걸어 왔다.

또한, 이번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 역시 출마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문화유산 등재라는 성과를 활용하고 싶어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한 데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현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 협력 등을 정권의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일본과의 대립을 피한 것

으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발표를 전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3국 간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이제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한미일 안보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정부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양국의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다.

이처럼 제국주의 문제로서,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국주의 강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울산/부산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반대하는 게 옳은가?

일시 8월 17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울산 비플라운지** (중구 성남동 94-12, 3층)

발제 **김광일**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 노동자연대 회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울산/부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3328-9853 / busan-ulsan@ws.or.kr

서울 서부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

일시 8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겨레교육 703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준호** (노동자연대) 국제담당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

일시 8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흥사단 3층 강당** (혜화역 1, 2번 출구 사01)

발제 **김준호** (노동자연대) 국제담당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경기/인천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

일시 8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신도림역 2층 가온 대회의실** (신도림역 1호선 지상층 개찰구 앞 4~6번 출구 방향)

발제 **김준호** (노동자연대) 국제담당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경기/인천 지역 모임들 문의 010-6224-2157 / kyongi@ws.or.kr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윤석열의 반동 재개에 맞설 진정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용현의 육사 1년 선배이자, 김용현과 마찬가지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현 국방장관 신원식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7월 말에는 공석이던 신임 호주대사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심승섭을 임명했다. 또다시 군 고위장성 출신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호주와의 군사 협력이 이 정부의 우선순위 의제임을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7월 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해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주일대사에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비난한 박철회를 임명했다. 그 직전, 정부는 강제동원 표시 없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북·중·러 견제를 강화하려는 외국대리인등록법과 형법 간첩죄 개정 등을 여론화하려고 했다.

윤석열은 7월 중순 홍보를 자제한 채, 이스라엘의 최대 군사 기업(IAI)과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대규모 기술 협력 행사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국가의 제국주의를 적극 편들고 지원하는 노선으로 더한층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외 정책은 군국주의적 지향을 늘려갈 것이고, 이는 노동계급 등 서민의 생활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다시 우경화

8월 5일 주가 폭락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경기 진작을 위한 친기업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서울



윤석열은 또 노란봉투법을 거부했다. 입법만으론 안 되고 기층에서 전투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 반환경적 내용과 함께 미분양 주택 매입 약속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기업주들을 밀어줘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실패작으로 입증된 ‘낙수 효과’를 헛되이 기대하는 것이다.

후기 낙태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살인죄로 고발하고, 이 수사를 맡은 경찰이 이참에 낙태약 유통까지 수사하겠다는 것도 반동 공세의 일부다. 8월 12일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7월 말 윤석열은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이정식의 후임으로 김문수를 지명했다. 김문수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손배로 가정 파탄이 나면 투쟁을 안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광훈과도 연합했던 극우다. 올해는 노조 없고 임금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해 감동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청문회를 앞두고 그는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이런 내각 인사는 개혁주의적이라 해서 노동계급 지도자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화물연대 투쟁 패배와 건설노조 탄압 이후 노동운동은 회복탄력성이 있는데도 정부에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정치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윤석열은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극우가 성장하고 주요국 정부들이 우경화하며 억압 강화 행태를 보이는 맥락 속에 있다.

반윤석열 전선을 혼란에 빠뜨리는 민주당

위기가 큰 만큼, 윤석열 정부의 반격과 공세를 물리치려면 노동자 등이 기층을 동원해 투쟁을 계급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계비 저항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지원, 수구 반동적 행태 등에 맞서 노동계급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야 한다. 삼성전자 파업은 생계비 저항이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줬다.(비록 그 잠재력이 다 발휘되진 못했지만 말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당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실질적인 운동 건설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열의 있게 조직한 8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대회는 윤석열 퇴진을 걸고 규모 있게 열렸지만, 향후 투쟁 계획이 없어 일회성 집회에 그쳤다. 민주당 비판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반윤석열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실질적인 쟁점도 없는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전국 순회로 열어 개혁 염원 지지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 문제로 전국 순회 집회를 한 적은 없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은 총선 참패의 여파에서 숨을 돌리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여당 지도부 내분 심화, 윤석열 탄핵 청원 140만 명 참가, 삼성전자 파업 등 윤석열에게 크게 불리했던 6~7월 국면에서 윤석열은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부자 감세를 주장한 이재명은 경기 침체 위기감이 커지자,

머리 맞대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윤석열이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상대인가? 민주당 집권에 대한 배신감과 환멸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올해 총선에서 윤석열이 참패한 것은 대중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이 차곡 차곡 반격 준비를 갖추 시간을 주었다.

특히, 영수회담(협치) 제안은 위기의 윤석열을 도울 뿐 아니라, 지지자를 배신하고 대정부 투쟁들을 지연시키고 교란시키는 일이다. 4월 총선 직후에 열린 영수회담도 윤석열에게 시간만 벌여 줬다.

경제 위기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도 이재명은 기업주들을 챙겨 국정(지배계급의 정치) 운영에 책임성 있는 정치 지도자로 보이려는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개혁 염원층의 지도도 얻으려고 한다. 몇 차례 대정부 장외 집회를 주도하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 이유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투쟁 진심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통과된 개혁 법안은 어차피 거부될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은 커지겠지만, 개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거부될 개혁 법안 두어 개를 통과시킨 것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이다.

민주당은 만만찮은 저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 상태를 관리·지속해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반사이익을 얻길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혁 입법 통과와 장외 집회 주도는 개혁주의 정당들을 민주당에 협력하게 만들려는 것(진보 포퓰리즘 전략)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때때로 저항을 주도하는 것은 대중의 개혁 염원이 지배계급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발전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은 인사권·시행령 등 행정 권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계급투쟁의 전면화 대신 민주당과의 입법 공조를 사회 개혁 성취의 경로로 선택하는 개혁주의 정치로는 복합·다중 위기 시대에 윤석열의 반동을 막아 내기도, 민주당보다 나은 (좌파적) 대안을 제공하기도 어렵다.

기층에서 광범하고 전투적인 대중 운동들을 건설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김문성



영화평 | <이오 카피타노>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위태로운 여정

마테오 가로네 감독의 영화 <이오 카피타노>(2023)가 8월 7일 국내에 개봉했다.

이탈리아어 제목을 번역하면 '나, 선장'이다.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과 신인배우상을 받았다.

마테오 가로네 감독은 2008년에도 <고모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고모라>는 현재도 활동하는 나폴리의 범죄 조직 "카모라"를 미화 없이 용기 있게 고발한 영화다.(원작 소설의 작가는 카모라의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오 카피타노>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이주민들의 실화에 근거했다. 다만, 난민선 선장 노릇을 했던 소년은 영화보다 한 살 어린 15세였다.

영화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는 두 흑인 소년의 이야기다.

도중에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 악독한 알선업자(브로커), 무장 반군, 야만적인 범죄 조직을 만난다.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가 국경을 틀어막을수록 이런 흡혈귀 같은 기생 집단의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경 통제가 낳는 위험

영화는 지난해에 나왔지만, 올해 나온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적시된 위험들이 거의 다 나온다. 폭력, 구금, 고문, 살인, 몸값을 노린 납치, 인신매매, 노예 노동까지.

강간과 장기 적출, 집단 추방과 강제 송환이 나오지 않을 뿐이다.

소년들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에 가려고 한다. 지난 십 년간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다가 3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사하라 사막 사망자는 추정치도 내지 못한다. 지중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들을 막기 위해 세운 철제 장벽과 철조망이 거의 2000킬로미터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지중해 단속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 이제 이주민들은 지중해보다 더 위험한 대서양으로 내몰린다.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향해 대서양을 건너다가 올해 1~5월에 만 5000여 명이 죽었다. 하루 33명꼴이다. 만약 영화를 올해 촬영했다면 지



사진 출처: 타임마그네트

유럽 정부들의 국경 단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희생되고 있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려는 것으로 줄거리가 바뀌었을지 모른다.

마테오 가로네 감독은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했고, 시간 순서대로 촬영했고, 전체 대본을 배우들에게 보여 주지 않았다. 실제 이주민 100명이 연기했고 그들의 조언을 영화에 반영했다.

이런 방식은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1948) 같은 걸작을 탄생시킨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과 닮았다.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이 거의 모든 영화에서 사용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이주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전쟁, 기후 위기, 기아, 불평등 심화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사람들을 이주로 내몬다.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국경과 이주 통제, 강제 송환 등을 강화할수록 난민, 이주민에 대한 사실상의 학살이 늘어날 것이다.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극우파 사상은 이주를 위협, 침략, 점령으로 묘사한다. 이주민들이 "원주민 백인" 또는 "전통적 미국인"의 영토를 점령하고, 인구를 대체하고, 문화를 잠식하고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인종 대교체) 이론'은 낡은 우생학에 근거한 인종차별적 음모론인데도 이제는 주류 우파 사상이 됐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프랑스 마크롱

정부나 영국 보수당까지 대놓고 말한다.

하지만 이주는 문젯거리나 비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누려 온 발전, 다양성, 긍정적인 것의 많은 부분이 이주가 준 혜택이다.

역사를 뒤집는 헛소리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가난한 이주민들은 유럽과 미국에게 식민 지배나 대량 학살을 당했던 지역 출신이다.

영화의 배경인 세네갈은 아프리카 대륙 가장 서안에 있고 특히 수도 다카르는 서안 맨 끝에 있다. 그래서 300년간 유럽 제국이 벌인 대서양 노예무역의 전초 기지로 쓰였다.

노예무역은 아프리카 전체에 치명적이었다. 1200만 명이 끌려갔고 2500만 명이 대륙 안에서 난민이 됐다. 당시 사하라 사막 이남 인구는 5000만 명에 불과했다. 이런 재난이 수 세기 동안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쳤다.

야만과 죽음을 멈추려면 국경·이주 통제에 반대하고 난민과 이주민을 환영해야 한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연대와 단결을 건설해야 한다.

<이오 카피타노>를 보고 나면, 그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현진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2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장,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서평 |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현대의 혁명적 고전 반열에 들 반제국주의 저작

이재혁

프란츠 파농은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태어난 흑인으로 1950~60년대 알제리해방전선(FLN)에서 활동한 혁명가이자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준 정신과 의사였다.

인종차별과 식민주의, 자본주의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 파농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흑인 평등권 운동에 뛰어든 많은 청년과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분출한 이후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데서 도움을 얻기 위해 파농을 읽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보아 넘길 수 없는 약점도 있다.

식민지와 폭력

파농은 민족 해방 운동 투사인 고문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로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악랄한 폭력을 직접 경험하며 폭력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식민지에서 정착민과 그 억압적 지배를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중재하는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폭력은 식민지 세계의 질서를 지배한다.

“식민지 체제는 무력으로 정통성을 유지하며, 그런 실패를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파농은 폭력으로 가득한 식민지에서 원주민과 정착민의 “화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파했다.

“정착민은 언제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저[원주민]들은 우리[정착민]가 사는 곳을 빼앗고 싶어 해.’ 그건 사실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착민의 거처에서 살기를 꿈꾸지 않는 원주민은 없으니까.

“그[원주민]는 비록 억압을 당할지언정 길들여지지 않는다.

“실제로 원주민이 잠들어 있거나 잊으려는 성향을 다소 가지고 있다고 해



1958년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연설하는 프란츠 파농

도, 정착민의 오만한 태도와 식민지 제도의 힘을 시험하려는 시도는 원주민에게 최후의 결전이 무한정 연기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사각각 일깨워 준다.”

파농은 식민주의의 폭력적 본성을 들춰내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자체로 거대한 폭력인 식민 지배에 맞서려면 폭력 저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피착취자는 해방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폭력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면서 파농은 식민 지배자들의 폭력과 피억압 원주민들의 폭력이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원주민이 대항 폭력의 방법을 선택한 순간부터 경찰의 보복은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이는 또한 [피억압] 민족주의자들의 보복을 부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등하지 않다. 비행기의 기총소사와 함대의 포격은 질과 양에서 원주민이 할 수 있는 폭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알제리 독립 전쟁을 다룬 명작 영화 〈알제리 전투〉에도 비슷한 대사가 나온다. 바구니에 폭탄을 숨겨 정착민들을 살해하는 방식이 비겁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프랑스 기자에게 체포된 알제리 해방전선 투사는 이렇게 응수한다.

“네이팜탄으로 민간인 마을을 공격해서 수천 명을 죽이는 게 더 비겁한 짓 아닌가? 비행기가 있으면 우리도 수월할 것이다. 당신네 폭격기를 주면 우리 바구니를 주겠다.”

폭력에 관한 파농의 주장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폭력 저항을 향한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적 공격을 훌륭하게 반박한다.

“독립의 저주”

파농은 알제리 해방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탈식민 국가들을 살펴봤다. 파농은 민족 해방 운동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은 뒤 부패하고 ‘민족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이 돼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봤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서구 부르주아지 기업인들의 역할을 떠맡은 것에 크게 만족하고 온갖 거드름을 떨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점점 더 자기 나라 오지의 사정과 저개발국의 참된 현실에 등을 돌리면서, 예전의 [식민] 모국과 외국인 자본가들을 지향한다.

“독립을 이루고 나면,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는 빵과 토지를 달라는 민

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나라를 민중의 신성한 손에 맡기는 대신 자신의 숨은 목적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민족 부르주아지라는 이름 아래 각자 자신의 몫을 찾으려 애쓰는 모리배들이 세운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이다.”

이는 파농 자신이 몸 담고 있던 알제리해방전선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알제리 독립 이후 파농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알제리해방전선은 알제리의 지배계급으로 올라섰고, 반제국주의 투쟁의 역사를 내세워 자신들의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했다.

농민에 대한 환상

파농은 식민주의의 본질을 훌륭하게 밝히고 민족 해방 투쟁이 빠질 수 있는 함정(“독립의 저주”)을 경고했지만, 그에 맞서 그가 제시한 해방의 대안에는 중대한 약점이 있었다.

파농은 해방을 쟁취할 혁명적 세력에 대해서 오판했다. 그는 도시 노동계급이 체제에 ‘매수’됐다는 편견을 받아 들였다. 그는 식민지 노동계급도 “식민지 체제로부터 커다란 수혜를 입은 계급”이라고 봤다.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프란츠 파농 지음, 남경태 옮김,
그린비, 328쪽, 15,900원



소총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

그래서 파농은 노동계급이 아닌 농민에 주목했다.

“식민지 나라에서 유일하게 혁명적인 세력은 농민이다. 그들은 잃을 게 없고 얻을 건 전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농민은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때로는 매우 격렬하게 투쟁한다.

그러나 농민은 각기 자기 토지 소유에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어 노동계급과 달리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 결과 자본가들의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없다.

알제리에서조차 노동계급은 중요한 투쟁을 벌였다.

1953년 알제리 부두 노동자들은 베트남으로 가는 전쟁 물자 운송을 거부했다. 그해 알제리에서는 노동자 27만

여 명이 220건 이상의 파업에 참가했다. 1960년 알제리 전역의 도시에서 분출한 대규모 노동자 시위는 프랑스 제국에 결정타를 먹였다.

1945년 이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제3세계 나라에서도 노동계급의 급진화와 투쟁의 물결이 있었다.

파농 사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한 것도 노동계급의 거대한 투쟁이었다.

농민과 무장 투쟁을 혁명적으로 본 파농의 입장은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마오주의에 가까웠다.

그런데 파농이 노동계급과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농민에 이끌렸던 것은 나름의 맥락이 있었다.

프랑스 좌파의 문제

파농은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프랑스의 주요 좌파 정당들이 알제리 해방의 대의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프랑스 사회당은 알제리 문제에서 반동적이었다. 알제리 전쟁 당시 집권해 있던 사회당 정부는 알제리 민족 해방 투쟁을 공격했다. 베트남에 이어 알제리까지 잃으며 프랑스 제국주의가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당 총리 기 몰레는 알제리해방전선을 분쇄할 때까지 알제리 전쟁을 계속하자고 주장했다. 기 몰레가 알제리 총독으로 임명한 라코스트는 대대적 고문을 벌이며 알제리인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사회당 정부는 영국·이스라엘과 공모해 1956년 이집트를 침략하기도 했다.

기 몰레는 1957년 프랑스 사회당 당대회에서 매우 역겹게도 마르크스주의의 용어를 써 가며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따라 [수에즈] 작전을 완수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프랑스 공산당도 알제리 민족 해방운동 지지를 거부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1930년대 인민전선 전략 채택 이후 강한 애국주의를 표방하며 프랑스 국가를 지지·옹호해 왔다. 알제리가 독립 후 소련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

스탈린주의 공산당은 말로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들먹였지만, 마르크스와

레닌이 주장하고 실천한 진정한 혁명적 원칙을 내다버렸다.

영국 노동계급이 아일랜드인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마르크스나, 혁명적 좌파가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투쟁에 연대해야 함을 주장한 레닌이 알제리 독립 투쟁을 지원하지 않은 프랑스 공산당을 봤다면 뭐라고 했겠는가.

알제리 해방 투쟁에 연대한 트로츠키주의 등 일부 혁명적 좌파가 프랑스에 존재했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소수였다.

노동계급에 대한 파농의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과 프랑스 공산당이 프랑스 노동계급 투쟁과 알제리 민족 해방 투쟁이 만날 가능성을 건어차 버린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으로 입증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주의 원칙으로 무장한 혁명적 좌파의 과제이다.

제국주의를 끝장내려면 제국주의의 뿌리인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만 한다. 그러려면 노동계급의 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약점이 있지만,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의 끔찍한 폭력에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볼 만한 명저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실제 민족 해방 투쟁들의 역사를 떠올리며 읽는다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더 큰 폭력”이 대안일까?

파농은 식민주의를 물리치려면 “더 큰 폭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모든 것은 무기의 분배에 달려 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건디다 못해 폭력을 동원해 저항에 나선다면 마땅히 지지해야만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고무하

고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뗏 공세가 거대한 반전 운동을 자극했듯, 피억압자들의 무장 저항은 강력한 연대를 촉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피억압자들은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군사력을 능가할 무장을 갖추 수 없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은 가자지구에서 영웅적 무장 저항을 벌

이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사 강국 이스라엘을 무장 저항만으로 꺾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사력 증강을 가장 중시하면 무기와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 운동의 친구가 아닌 세력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생긴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의 경우, 무장 투쟁을 최우선에 두면 제국주

의 질서의 수혜자·수호자들인 주변 아랍 정부들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제국주의의 뿌리인 자본주의의 이윤 체제를 타격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고유의 힘을 간과하게 된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폭력 저항은 무조건 지지해야 하지만, 노동계급 대중의 광범한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리셀 참사 49일을 맞아 희생자들의 거주지 안산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항의하다

“이주노동자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보상 내국인과 차별 말라”

시끌벅적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시장에 구호가
울려 퍼지자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거리로 나와 행진을 지켜봤고, 응원의 목
소리와 박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맞다. 아리셀 처벌돼야지,” “야, 더
운대 욕본다.”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내외국
인 노동자들, 노점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기던 이주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영어로 외치는 구호를 따라 하는 외국
인 노동자들도 보였다.

대부분 이주민으로 보이는 상인들도
“잘한다” 하며 응원을 보냈다. 이따금 들
려온 일부 상인들의 고함은 우호적인 관
심과 박수 소리에 압도돼 금세 묻혔다.

관심과 응원

아리셀 참사 49일을 맞은 8월 11일
안산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일
터!’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내외국인 100여 명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 처벌과 이주민 희생자에
게 내국인과 차별 없는 보상을 요구했
다. 원어민강사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충청 등 여러 지역에서 먼 걸음을 달려
왔고,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해
왔던 청년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일요일에만 쉬는 대다
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특
별히 일요일 안산에서 열렸다. 집회가
열리는 내내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
자들이 삼삼오오 집회 장소 주변에 모
여앉아 발언을 경청했다.

이주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안산에
는 100여 개 나라에서 온 노동자 수만
명이 거주한다. 안산 전체 인구의 10퍼
센트를 넘는다.

첫 발언자로 나선 박동찬 ‘경계인의
뿔소리 연구소’ 소장도 이날 안산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집회 참가자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열린 집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아리셀 희생자 23명 가운데는 5명
의 한국인과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있
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절대다수는 저희
가 오늘 모인 이곳 안산 원곡동과 또 옆
동네 시흥 정왕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셨습니다.”

박동찬 소장은 중국 동포이자 현
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
회·피해가족협의회’에서 피해자 유족
의 통역을 맡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참사가 발생했던 아
리셀 공장 앞에서 희생자들의 49재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오전에 함께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리셀 사측은 교섭은 회피한 채 며
칠까지 합의해 주면 5000만 원을 더 주
겠다. 그리고 ‘당신네를 비자를 가지고
는 여기[해당 업종]서는 일하면 안 되는
비자였다. 추방 대상이다’ 이렇게 개별
적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7일 전국 곳곳에
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희망버스가
55대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 왔고 노
동자연대 회원인 김승섭 노무사의 발
언이 이어졌다.

“정부는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의 보
상도 내국인과 차별하고 있습니다. 내
국인은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
지만, 이주노동자는 예상되는 한국 체
류 기간 이후부터는 출신국의 임금을
로 계산합니다. 예상되는 한국 체류 기
간도 협소하게 인정합니다.

“아리셀의 모회사는 에스코넥이고
에스코넥은 삼성SDI에 부품을 납품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하
청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
결해서 이러한 참사에 맞서지 않는다
면 더 자주 끔찍한 산재 사고가 이어질
것입니다.”

차미크르 수원이주민센터 공동대표
는 한국 정부에 이주민들을 쓰고 버리
는 기계 취급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노동자가 죽
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한국이 필요하면 쓰
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기계 취급을 받
아야 합니까?

“동지 여러분, 차별 없는 노동 세상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 목소리를 높입니다.”

존스 갈랑 카사마코(필리핀인 공동
체) 사무국장은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9일이 흘렀습니
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구현되지 않
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서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
다. 국제연대 만세!”

방글라데시인 이주노동자 술탄 사길
은 벙글어와 우르두어로 발언했고, 뒤이
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그는 집회
시작 전 벙글어와 우르두어로 주변에 있
는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노동자들
에게 참가와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이 나라에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주민들은 적절한 안전 장비도 지급받
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일감이 줄면 우리는
해고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합니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차
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책임자 처벌, 차별 보상 반대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7월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아리셀 사
측을 압박하고 이 쟁점이 잊혀지지 않
도록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8월 17일에는 참사 55일을 맞아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
망버스’ 행사가 참사 현장과 화성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안산에서 열린 집회도 아리셀
참사 항의 운동이 더 주목 받고 커지는
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기층에서 아리셀 참사 항의의 목소
리가 더 커지게 하자.

장호중

취재기 전문과 더 많은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